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16118
----------	-------

제안연월일 : 2026. 1. 16.

제안자 : 이언주 · 윤건영 · 권향엽
이용우 · 윤종균 · 장종태
백혜련 · 이학영 · 박정현
김용만 · 안태준 · 강득구
박해철 · 김남근 · 진성준
박희승 · 김태년 · 이춘석
안도결 · 김우영 · 김종민
한준호 · 오기형 · 양부남
남인순 · 양문석 · 고민정
이수진 · 소병훈 · 오세희
부승찬 · 최형두 · 임미애
한창민 · 정진욱 · 이해식
정춘생 · 임호선 · 박지원
안철수 · 서영석 · 김태선
이철규 · 정일영 · 박홍근
박홍배 · 백승아 · 김대식
주철현 · 손명수 · 이광희
김승원 · 김현정 · 권영세
이재정 · 홍기원 · 이재관
김문수 · 박용갑 · 추미애
윤준병 · 박 정 · 최혁진

이훈기 · 박은정 · 박범계
김영배 · 이건태 · 황명선
황정아 · 허종식 · 김상욱
박선원 · 조경태 · 최민희
민홍철 · 문대림 의원
(77인)

주 문

최근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에 대하여 이란 정부가 군과 치안 세력을 동원하여 무차별 발포, 즉결 처형, 대규모 체포 등 극단적인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이미 만 여명을 넘은 데다 계속하여서 사망과 부상 등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바, 국제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양상이 사실상 민간인 학살에 준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상태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무장 상태로 자유와 생존,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자국민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대한민국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국가 폭력의 참혹한

결과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경험한 국가로서,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이해관계나 에너지·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묵인하거나 방관한다면, 이는 대규모 인권 침해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란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교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한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 학살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란 정부에 대하여 즉각적인 무력 진압 중단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를 촉구하며,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이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과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이란 내 정세 악화로 인하여 위협에 처한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하여 외교적·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이란 국민이 폭력과 공포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며, 이란이 다시금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장기간 누적된 정치적 억압, 경제적 파탄,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국제적 고립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분출된 결과임.

그러나 이란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대화와 개혁이 아닌 무력과 폭력을 앞세운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자국민의 생존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인권 문제임.

대한민국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민주화 탄압의 아픔을 경험한 국가로서,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란 정세 불안은 현지 체류 대한민국 교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촉구할 필요성이 큼.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란 정부의 민주화 시위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 그리고 우리 교민 보호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함.